

[오마이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①] 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합니다

11.12.15 14:31 | 최종 업데이트 11.12.15 14:31 전해원 (jhw3762)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말>



▲ 지난해 7월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발족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최인성 학생인권조례

세상에는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애매한 인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1993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처럼 저 역시 19살의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3은 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 시절을 12년에 걸쳐 마치지만 저는 그냥 10년 4개월 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지만 내년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대. 이렇게 애매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줄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퇴생, 검정고시생, 탈학교 청소년, 예비 대학생, 혹은 잉여.

대학생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가, 이제는 '고딩'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조금 어색해진 제가, 나이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달고 다닐 날도 20일밖에 안 남은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가방끈도 짧은 데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한지라 글의 앞부분만 읽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

르실 듯하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딱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원안 그대로, 훼손 없이, 당장 제정하라.'

여기까지만 읽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 잉여의 19살 청소년이 왜 이를 악물고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궁금하다면 조금 더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 다녀 본 경험이 있다면, 그때를 기억하며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면 왜 행복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시절이 불행했다면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곱씹으며 제대로 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에 담긴 9만7702명의 마음

여기에 9만770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민 1%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유효판정이 난 서명자의 수가 9만7702명이었습니다. 무효 서명까지 더한다면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전국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인 '경기학생인권조례'가 놓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법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학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 제한요건의 삭제 등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보다 한 발 더 진보한 조례안이 탄생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학생인권보장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첫 제도적 성과라는 의미가 큼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이는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든 부끄러운 세상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학생인권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낡은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10만여 명의 서울시민들, 오랫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땀 흘려온 사람들, 교육주체들, 그리고 130만 서울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 왔을 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들을 나열해 놓은 조례안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다른 이들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63개 보수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지난 13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게다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1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서울학생인권 주민발의안은 오는 16일에 있을 교육상임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 본회의(19일)에 상정조차 될 수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질 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다

그 중요성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올해 처리되지 못한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낡디낡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1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130만 서울시 청소년들의 열망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힐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으로서 감히 임신과 출산을 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합니다. 단체로 난독증에 걸리기라도 하셨나 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하라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단체로 성소수자가 되자는 말과 같은 것인가 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내몰지 않게 만들어야 할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로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 스스로가 차별을 재생산해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차별로 얼룩지고 너털너털해질 학생인권조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내야 할지, 5만 원을 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인의 관심과 집착의 기준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허나, 학생을 향한 매와 사랑을 구분하는 것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권'은 애매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단서 조항도 달지 않은 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기에, 그것은 더 확고해지고 명확해져야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애매함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세상과 학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지워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살아 숨쉬며 존재하지만 마치 태초부터 없던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가두고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지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롱한 빛들이 제 색을 잃은 채 바래져만 갈 것입니다.

그 어떤 학생도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살아왔던 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내 친구들의 존재를, 이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훼손 없는 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져야 했던 시간들을 지나, 10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주할 수 있었던 내 자신에게



▲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한국 교총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보내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오늘날 학교에 다니고 있을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종교의 이유로, 성적을 이유로 그렇게 그 견고한 기준과 고정관념, 통제와 폭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해 왔을지도 모를 당신이 그때의 내 자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초의 참회록이자, 기성세대로서의 당신이 지금의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단 한 순간도 온전히 '내 자신'일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며 끝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들어야 했던 순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학생 주체에 '감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순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벽장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별받지 않을 나'는 그렇게 지워져도 되는 것이었냐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쥐야 할지, 그것이 부여해도 팬찮을 권리인지 저울질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는가. 장황한 설명과 변명은 절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훼손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출처 : 서울학생인권조례, '애정남'이 결정한다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소수자' 차별하는 학교가 '미친학교'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②]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다

11.12.16 18:07최종 업데이트 11.12.16 18:07 박소라(news)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어,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글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말]

학교와 교사들은 참 오지랖이 넓다. 그들은 입시를 위해 학생들의 성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 규범을 벗어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렇게 행해지는 폭력들은,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고 심지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여겨진다. 특히나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청소년 등에 대한 혐오범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입지는 매우 좁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수업 중 교사들의 발언, 교과서 내용, 학생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주위엔 당연히 없는' 존재이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소수성이 학교에 알려지는 순간, 학교로부터 또 같은 학생들로부터 온갖 직·간접적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아웃팅 당해서 학교전체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기도 하고, 퇴학당하거나 자퇴를 권고받기도 한다. 굳이 그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임신·출산 청소년들은 대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물론 자퇴생·퇴학생들 중에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인 내가 학교를 박차고 나온 이유

나는 탈학교 레즈비언 청소년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데엔 교사들의 이런 저런 폭력, 말도 안 되는 온갖 교칙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적이거나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교육과, 호모포비아인 교사들과 학생들도 한몫 했다.

학교에서의 커밍아웃 경험이 있는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은 차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커밍아웃은 상상도 못 하고 이성애자인 척하면서 생활했다.

10년 가량을 그러고 살았더니, 이게 내 삶인가 싶고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자퇴를 결심했



▲ 지난해 7월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최인성

다.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면서 내 돈을 안 들이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변한다면 돌아갈 지도 모르겠다.

보수 단체들이 "학생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임신·출산시키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코웃음이 나온다. 동성애자와 임신·출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차치하더라도, 어째서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을 '다 같이 소수자가 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혹은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그럼 나보고 장애인이 되라는 이야기냐!", "그럼 나보고 성전환수술 받아서 여자가 되라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발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바뀌어야 하는 것은, 폭력적인 '미친 학교'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은 학교를 다니는 성소수자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진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그나마 만들어지는 안전망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이 사회의 편견과 청소년 보호주의에 근거한 보수 세력들의 주장들에 의해 사라진다면, 학교를 다니고 싶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 말인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없느니만 못하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교내의 성소수자들과 임신·출산 청소년들이 아니라, 현재의 폭력적이고 다수자 중심적이고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미친 학교들이다. 그러한 학교들을 바꾸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임신·출산 청소년 차별 금지 조항은 들어야만 한다.

덧붙이는 글 | 기사 작성자의 사정에 의해 가명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농성 지지한다.
서울시의회는 주민 뜻 받들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2월 14일 인권활동가 40여명이 서울시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민 9만여명의 뜻과 동참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주민조례안)으로 발의된 것은 인권이 시대적 요구이며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또한 주민조례안의 내용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으로써 우리사회 인권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세력과 보수집단은 주민조례안 중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성적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며 이것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임신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사실무근의 왜곡선동으로 서울시위원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주민조례안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먼저 우리 인권단체들은 분명히 한다. 인권에 반쪽짜리란 있을 수 없다.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명의 인권도 소중히 하는 것, 한명 한명을 모두 소중히 하는 것, 한 명이라도 인권침해를 받는 학생이 있다면 이를 구제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취지이며 이유이다.

따라서 이에 반대한다면 일부 기독교, 보수집단은 함부로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차라리 학생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라. 권위를 내세워 학생위에 군림하고 학생을 인격으로 대우하기 싫다고 고백하라. 교육을 운운하면서 차별과 왜곡, 혐오를 조장하고 위력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겁박하여 주민조례안을 난도질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이같이 반인권, 비인권, 사이비 인권 논리를 앞세운 일부 집단들의 주장과 위협에 따를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면, 서울시 교육위원들에 더욱 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더욱 강고한 인권의지를 요구한다. 수준높은 인권과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민조례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할 책임을 요구한다.

오는 12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와 19일 본회의는 서울시민이 학생인권을 보장할 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점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민들과 함께 진정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걸맞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4개 단체)

[문화연대 주간논평]

인권에 협상은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서울 시민 9만 7천여 명의 동의로 만들어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이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회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세부항목들은 수정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심의가 16일과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차별 금지 항목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등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세부 항목들 중 ‘성적 지향’ 과 ‘임신 또는 출산’ 에 대한 항목 삭제를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러한 항목들로 인한 차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사회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차별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 할 수 없다

지난 10월 6일, UN아동권리보호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 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차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근거로 차별의 피해를 주장하고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최소한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명기된 항목들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차별이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와 학교의 약속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켜주어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비롯해 국제인권기준, 국내법등을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 중 그 어떠한 것도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그 열거된 항목들을 보며 사회와 학교에서 더 이상의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약속해야 한다.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원안 그대로의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10만여 명의 서울시민, 그리고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에 서명조차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이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행을 촉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지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2011. 12. 14

문화연대

[프래시안]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라"

[기고] 우리 모두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몽(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

기사입력 2011-12-15 오후 2:49:15

바로 어제, 서울에서 200여일 가까이 상경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가 1년 반 만에 원직 복직되고 가해자는 해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살기 위해' 차별과 피해를 이야기해야 순간과,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호소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에 다시 '살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순간을 오가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200여일의 농성. 그 시간은 얼마나 눈물겹고 지난한 것이었는지, 또 한편으로 얼마나 열정 가득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앞에서의 긴 농성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오후, 또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점거농성이 시작되었다.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은 처음으로 시의회, 입법기관 앞에 섰습니다"로 시작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이슈를 가지고 '최초로' 시도하는 점거농성.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앞 둔 현재, 그 역사적인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존재하는 몸, 보이는 몸으로서 말하기

그러나 살아남고자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와 육체에 익숙해지지 않는 체제 안에 존재하는 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벨 훅스

남들이 당신을 설명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남들이 말하게 하지 말라. - 마사 키더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에서 오랫동안 내걸었던 슬로건 중 하나는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이다. '모르는 것'과 '없는 것'을 등치시켜온 오랜 차별의 역사에서 희미하게나마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어려운 성소수자들이 '우리는 여기에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한 명 한 명 용기 내어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비정상이라는 이분법의 규범대로 설명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때로는 분투하면서, 때로는 자기혐오와 혼란을 지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소수자들의 시의회 점거농성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몸'으로써 기록될 수는 없다는 결연하고도 절박한 집단의 목소리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상기하는 것 이외에, 성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한 '무엇'을 보고, 기억하고, 공유하

고 있는 것일까.

9만 여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통과 여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투명하다. 성적지향을 비롯해 임신 및 출산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성윤리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그리고 그들이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박, 반동성애 보수 세력의 집결을 부담스러워하며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 '모든 차별'이라는 실효성 없는 문구로 주민발의안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서울시의회, 그리고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조차 '과도한 권리 요구'라고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 이 모든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놓여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성소수자들은 무엇을 해 왔는가를 떠올려본다. '현실은 잘 알고 있고 공감하지만,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낮다'는 우려에 성소수자공동행동의 차별사례팀과 많은 개인들은 밤낮을 지새우며 차별사례집을 만들어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모여,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사례를 모으고 알리기 위한 보고대회들을 열기도 했다. (국가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차별사례를 연구하고 정책 마련에 활용하는 스웨덴과는 너무나 다르다) 차별을 당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마주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그럼에도 하릴없이 되돌아오는 메아리는 '현실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공감하지만...'이다.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하루 앞 둔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쉽게 흔들 수 없는 대중적 지지 기반이라는 걸 만들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속절없는 '자기 탓'을 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수많은 편견과 차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성소수자/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말해왔던 결과가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남는다면, 이건 분명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나, 불공평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싶다.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왔는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 잠시라도 침묵해 본 적이 있는지.

위기, '결정의 시간'

농성에 참여하는 많은 성소수자 및 지지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민발의안 그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리고 차별사유가 명시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의원회관 농성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 청소년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거냐' 같은 '말씀'들이 존재하지만, 남들과 다름없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싶다는 열망을 품은 무수한 십대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청소년기에 잠시 겪고 마는 한 때의 혼란스러운 감정 아니냐' 같은 '말씀'이 만연하지만, 이성애만 존재해야 하며 그것만이 정상이라는 규범을 거스

르는 자기 존재를 철저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십대 성소수자들이 있다. 이들이 좀 덜 아플 수 있는, 더 나은 학교 꿈꾼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 소박한 열망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 정말로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닌, '시기상조'의 문제인가.

지금도 의원회관의 차가운 바닥에 모여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생도 변화 없이는 진보할 수 없고, 변화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혼란을 수반한다. 회랍 사람들은 '위기(crisis)'라는 말을 재앙이나 파멸의 의미 없이, '결정할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 주디스 베넷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낙인과 차별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행사

많은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운동 최초의 집거운동을 통해 '보이고자' 노력한 만큼, 기억되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낸 만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화를 열망한 바로 그 만큼- '위기'를 '결정할 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소임의 실천을, 그 누군가는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다.

우리 모두,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인권오름] 성적체성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모든 사람이 당사자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 주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서명을 받을 당시부터 네이버 검색창에 학생인권조례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가 ‘학생인권조례 동성애’로 나왔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초안은 성적지향, 성적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배제한 채로 발표되었고, 논란 끝에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성적지향을 포함시킨 채로 발의하였다. 한 고비를 넘겨 지금은 의회 심의단계로 넘어간 상태이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불편하기 그지없는) 호기심을 보이듯, 저쪽 사람들의 거센 관심과 반대에 현재 학생인권조례 논의는 ‘성적지향, 임신출산을 뺄 것인가’를 놓을 것인가’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동성애 조장해서 에이즈 퍼뜨리고 초등학교 임신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가 반대파들의 구호였다.

십대의 성과 학교가 가르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십대의 성에 대한 담론이 나오는 경우는 성교육 관련해서거나, 혹은 십대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비난할 때뿐이다. 성소수자에 관련해서도 그들을 차별할지 안 할지 비성소수자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수준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性) 금기는 존재하고, 이는 정상적인 성과 그렇지 않은 성 사이의 권력관계를 형성해서 차별할 사람들을 골라낸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분홍색과 빨간색은 여자색, 파란색과 초록색은 남자색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여자 친구들은 그림을 그릴 때 여자색 크레파스를 썼고, 남자 친구들은 남자색 칫솔을 가져와 양치질을 했다. 반에서 혼자 파란색을 좋아하는 여자애였던 내게 누군가가 말했다. “넌 남자 같아서 너랑은 놀기 싫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남학교, 여학교로 흩어졌다. 남녀공학 복도에는 왼쪽은 남학생, 오른쪽은 여학생만 지나다닐 수 있는 ‘윤리선’이 그어졌다. 여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지교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교칙부터 불건전한 이성교제 시 벌점 10점이라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까지, 학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역할을 규칙으로 하나하나 정해두고 가르치는 공간이다.

그 와중에 성소수자로 밝혀지거나 임신 출산한 학생들은 (너무도 ‘비정상적’이라 교칙에도 언급되지 않는 않지만) 자퇴를 강요당하고 퇴학조치가 으레 가해졌다.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원인은 주로 ‘시험성적 비관’으로 가려진다. 십대에게 덧씌워진 성역할은 분명하다. 이성애자이면서 이성을 욕망하지 않을 것, 여자답고 남자답지만 무성적일 것,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직은 이성 관계에서 ‘순결’을 유지할 것!

그러나 통념과는 다르게, 나와 내 주위 사례들을 보면 이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성적 체험과 상상(주로 자위행위이거나 꿈속 환상이기는 했지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으로 연애감정을 느낀 시기도 대부분 십대 초반이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일까?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일까?

어떤 계층에게 성적 권리를 빼앗는 것은 성 억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십대의 성에 대해 저들이 저토록 완고한 입장을 취할 때, 미성숙과 비정상, 사회 체제의 파괴, 부모에 대한 예의와 아직은 공부할 때라는 등 온갖 논리가 따라온다. 이성애적 부부가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성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것이 통념화된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가족 체제가 유지되어야 남성에게는 과잉노동을, 여성에게는 무보수 가사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면, 십대의 성은 확실히 금기시되어야 마땅할 테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 사회에 적응하여 기존의 가치를 따르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인간 양성이 현재 학교의 목적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여성과 남성들은 학교에서 취해야만 했던 여성과 남성의 포지션을 신기하리만치 거의 그대로 답습한다. 두 분류로 나누어진 성은 좀처럼 하나가 되지도, 더욱 다양한 분류로 나누어지지도 않는다.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어야 할 섹슈얼리티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고, 순결함과 문란함으로 구분되고,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현실은 분명 인위적이고 차별적이다.

기존 성체계의 폭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계층은 성소수자와 비혼모를 포함한 ‘보편’적인 성역할 바깥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구분된 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트랜스젠더이고 동성애자이며 정상가족 신화의 피해자다.

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임신 출산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문제가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로만 읽히는 것에 반대한다.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지정하기 전에는 성소수자도 없었고, 올바른 성행위가 혼인 후로 미뤄지기 전에는 청소년 비혼모도 없었다. 십대 성소수자와 십대 비혼모를 구분 짓고 차별하게 만든 장치들은 무엇인지, 나는 이 고리가 많은 부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 주리 님은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 모임 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279 호 [기사입력] 2011년 12월 14일 13:18:42